

법령 I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시행령 포함)**

문 1.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훈련실시대상 인력 중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만 훈련이 면제되는 사람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임명된 민방위대장
- 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4·19혁명부상자
- ㄷ.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 ㄹ. 불치의 질병으로 훈련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2.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비상대비업무의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비상대비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새로운 기본지침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기본지침을 다시 수립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기본지침의 수립절차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③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는 사항에는 비상사태와 관련되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국내외 환경변화 분석·예측·평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 전략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국무총리가 수립하는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에 자원소요량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아래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0조(자원조사 등)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에 관한 자격이나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발급 또는 취소 사실을 본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자격이나 면허의 검정·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단체의 장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①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
-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③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 ④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

문 4.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및 지도·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도 교육청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업체가 도산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를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업무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 임명권자의 업무상 지시에 대한 순응 정도를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문 5.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에 대하여 자체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5개월분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자를 비축하게 할 수 있다.
- ②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축한 물자가 성능이 더욱 우수한 대체품의 개발 등의 사유로 비축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비축을 해제할 수 있지만, 긴급한 경우라면 해제 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 규격, 수량 및 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정부가 비축한 물자의 품목·규격·수량·대체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문 6.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2조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된 자 및 물자의 소유자에게 참여 또는 사용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
-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요청은 중점관리대상 지정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물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긴급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요청해야 한다.
- ③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의 사용 요청에 따라 훈련에 제출된 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훈련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④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통합방위법」 제14조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된 경우에는 30일 이내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문 7.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가)~(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2개 부처 이상의 부문에 관련되는 전국 또는 지역별 훈련은 인력훈련 부문에 대해서는 (가) 이/가 (나) 에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정부연습과 자체연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다) 이/가 (라) 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가)	(나)	(다)	(라)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국무총리	대통령
②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총리	대통령
③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④ 국무총리	대통령	행정안전부장관	국무총리

문 8.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비상대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설을 요청받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이 부담하여야 한다.

문 9. 비상대비에 관한 법령상 보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훈련대상물자의 사용료와 그 밖의 보상은 훈련이 끝난 당시의 과세표준율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지만, 전기통신설비의 사용료는 전신전화요금표를 기준으로 한다.
- ㄴ. 훈련에 참가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 의료지원에 드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며, 이 경우 국가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 ㄷ.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의 방법 및 절차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 ㄹ. 정부는 공유재산인 훈련대상물자가 훈련으로 인하여 유실·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에게 보상하지 아니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민방위”란 민방위사태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관군의 지도 하에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모든 자위적 활동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군사 작전상 필요한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정행정기관의 장”에는 포함되지만, “중앙관서의 장”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사태의 신속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그 재정상 조치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하는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사태는 민방위사태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따로 민방위사태에 해당하는 재난사태를 정할 수 없다.

-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중앙민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재난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구호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담당한다.
 - ② 중앙민방위협의회의 분과위원회인 민방위기획위원회는 소관 기본 계획안 및 민방위 집행 계획안을 심사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안 정리 및 그 밖의 서무는 국무총리가 관장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간사는 행정안전부 비상대비정책국장이 담당하고 중앙민방위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다.
-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무총리는 매년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기본 계획안을 종합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을 8월 말까지 작성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집행계획을 작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후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 집행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집행 계획에 따라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 시·도계획을 작성하여 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확정하고, 국무총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 소관 민방위 업무에 관한 시·군·구 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문 15. 민방위기본법령상 재해 등의 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사망 보상금의 지급액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을 기준으로 함)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 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하면 지급하는 재해 보상금은 사망 보상금과 장애 보상금으로 구분한다.
- ㄷ. 휴업 보상금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ㄹ.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동원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 재해 보상금은 시·군·구가 부담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통령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읍·면·동장 소속으로 읍·면·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읍·면·동민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중앙민방위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거나 그 밖에 중앙민방위협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 ④ 중앙민방위협의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위원이 된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정보 및 정보단말장비의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민방위 정보는 민방공을 위하여 발령하는 민방공 정보와 그 밖의 재난 시에 발령하는 재난 정보로 구분하고, 민방위 정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경찰청장이 정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거부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민방위정보단말장비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그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대원에게 임무 외의 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소속 대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민방위 대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ㄴ.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ㄷ. 전시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 ㄹ. 피고용인이 민방위 대원으로 훈련을 받은 때에 그 기간을 휴무로 한 고용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의 무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은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무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기·탄약·장비와 그 밖의 부속품 등은 군의 보급절차에 따라 보급한다.
- ②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한다)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를 소멸시키기 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임무를 수행할 때 출동한 예비군은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무장 소요를 진압하거나 중요시설 등을 경비할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문 20. 예비군법령상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비상근예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예비군의 정원은 안보환경, 군 구조 개편 정도, 상비 병력의 연차적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5,0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국방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 ②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을 그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선발하지만,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 ③ 국방부장관은 선발된 비상근예비군이 질병 및 심신장애, 직무수행 능력의 부족, 불성실 복무 및 개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집을 중단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은 비상근예비군 선발계획을 선발일 30일 전까지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문 21. 예비군법령상 동원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동원명령이 발령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에는 전출목적, 전출지 및 전출일을 적은 신고서를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ㄴ. 동원명령을 받은 사람이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동원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본인의 세대주 또는 가족 중 성년자는 동원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ㄷ. 동원명령 발령당시 동원명령 발령 지역의 인접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에 있는 사람은 동원명령 발령 후 24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해야 한다.
- ㄹ.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구술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동원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동원 연기원서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문 22. 예비군법령상 소집통지서의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소집통지서를 훈련소집일 10일 전까지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지만, 동원에 대비한 불시 훈련이나 점검을 할 때에는 방문 통보의 방법이 아닌 전화나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예비군대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나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게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자가 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인 경우에는 소집통지서 전달 전에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수임군부대의 장은 소집통지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전달하려면 미리 예비군대원에게 전자우편주소와 수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 23. 예비군법령상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의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②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은 예비군대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보다 우선적으로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예비군대원을 치료한 민간의료시설의 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치료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 ④ 관할 군사령관은 수임군부대의 장으로부터 민간의료시설 치료비의 지급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민간의료시설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 통지를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치료비 지급을 명하여야 한다.

문 24. 예비군법령상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과기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한다.
- ② 예비군의 관리·운용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군부대의 장은 예비군의 임무수행을 위한 대대 이하의 예비군부대의 동원과 예비군의 작전지휘, 작전상 필요한 긴급조치에 관한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탁할 수 있다.
- ③ 예비군이 출동한 지역에 군이 출동하여 작전하는 경우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은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그 군부대의 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지휘를 할 수 있다.
- ④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지 않은 경찰서장은 사태가 긴박하여 국방부장관이나 그 위임을 받은 군부대의 장에 의한 예비군 동원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스스로 예비군을 동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동원이 해제된다.

문 25. 예비군법령상 방위협의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방위협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 위원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 및 해당 직장의 간부급 직원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산업단지 직장방위협의회는 통합직장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문 26. 예비군법령상 벌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라)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전시·사변이거나 적 또는 무장공비와 교전 중에 작전지역에 동원된 예비군이 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작전상 검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검문하는 예비군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가)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예비군대원이 훈련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나)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소속 예비군대원을 상대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지휘관은 (다)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또는 파기하였을 때에는 (라)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나)	(다)	(라)
①	2	100	1	30
②	2	500	2	30
③	5	100	1	50
④	5	500	2	10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월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한 수시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해당 등급의 평가사유를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문 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해외재난상황의 보고 및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재외공관의 장은 관할 구역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그 상황을 외교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해외재난상황의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지체 없이 해외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해외재난국민”이라 한다)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재난국민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ㄷ. 해외재난국민의 가족 등은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ㄹ.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재난국민의 생사확인 등 안전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문 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방지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부속물 중 제방·호안(기슭·둑 침식 방지시설)·보 및 수문
 - ② 「하천법」에 따른 강수량계, 수위계 등 수문조사에 필요한 시설 중 홍수발생의 예보를 위한 시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재시설
 - ④ 「어촌·어항법」에 따른 유람선·낚시어선·모터보트·요트 또는 윈드서핑 등의 수용을 위한 레저용 기반시설
- 문 3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디지털광고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난에 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업무 중 이동전화 업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업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기상청장은 호우에 의한 1시간 누적 강우량이 50밀리미터 이상 관측되는 경우에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전기통신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전기통신시설의 우선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난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 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작성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대하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도지사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승인하는 때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 결과를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 ㄷ.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은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① ㄱ(O), ㄴ(X), ㄷ(O), ㄹ(X)
 ② ㄱ(O), ㄴ(X), ㄷ(X), ㄹ(O)
 ③ ㄱ(X), ㄴ(O), ㄷ(O), ㄹ(X)
 ④ ㄱ(X), ㄴ(O), ㄷ(X), ㄹ(O)

문 3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사태의 선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ㄱ. 재난사태의 선포대상 재난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장에 따른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일시 정지 등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을 말한다.
- ㄴ.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휴교처분을 요청할 수 없다.
- ㄷ.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인한 위험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포된 재난사태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 ㄹ.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 재난경보의 발령,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위험구역 설정, 대피명령, 응급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① ㄱ(O), ㄴ(O), ㄷ(X), ㄹ(X)
- ② ㄱ(O), ㄴ(X), ㄷ(O), ㄹ(X)
- ③ ㄱ(X), ㄴ(O), ㄷ(X), ㄹ(O)
- ④ ㄱ(X), ㄴ(X), ㄷ(O), ㄹ(O)

문 3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시행하는 계획, 점검·검사, 교육·훈련, 평가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ㄷ.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등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ㄹ.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문 3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의 복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으로는 재난의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 ② 해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재난지역 피해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이 특별재난 지역 피해에 대한 재난복구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재난피해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를 지원할 수 있다.

문 3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이다. (가) ~ (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가) 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나)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동법 시행령 제75조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이하 “최저적립액”이라 한다)의 (다)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예치금액의 누적 금액이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라) 를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의무예치금액을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마) 로 낮추어 예치할 수 있다.

	<u>(가)</u>	<u>(나)</u>	<u>(다)</u>	<u>(라)</u>	<u>(마)</u>
①	1	100분의 1	100분의 10	15배	100분의 5
②	1	100분의 5	100분의 10	15배	100분의 1
③	3	100분의 1	100분의 15	10배	100분의 5
④	3	100분의 5	100분의 15	10배	100분의 1

법령 I - 헌법

문 1. 역대 헌법상의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 제3차 개정 헌법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로써 그 정당의 해산을 명한다고 규정하여 위헌정당 해산제도를 두었다.
- ②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는 복수정당제 보장을 명시하였으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는 필수적으로 정당추천을 받도록 하였다.
- ③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또는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지만, 합당 또는 제명으로 소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의 특혜조항을 두었다.
- ④ 1980년 제8차 개정 헌법에서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조항을 두었다.

문 2. 명확성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한 기술’을 범죄구성요건인 ‘산업기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 중 제14조제1호 가운데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 취득행위’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② 형의 선고와 함께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은 피고인이 ‘빈곤’을 이유로 해서만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487조 중 제18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 중 ‘빈곤’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외국인이 귀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품행이 단정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한 구 「국적법」 조항은 귀화신청자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 경력, 전과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자의적일 수 있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 ④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중 ‘직접’ 부분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문 3. 행복추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위 작업기준 위반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근로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②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 계좌인 경우에 공동명의자 각각이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처벌하는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항은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전혀 상관없이 법적 제재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하여 공동명의 해외금융계좌를 가진 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하여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우리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조항은 일반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교통사고 발생 시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정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교통사고 관련 운전자 등이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날 유인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과태료와 같은 행정적 제재만으로도 조치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문 4. 평등권 및 평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지방자치법」의 ‘도’의회의원, ‘시’의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정치자금법」 조항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차별로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② 초·중등교원과 달리 대학 교원은 노조형태의 단결체가 아니더라도 전문가단체 혹은 교수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교원과 구별되므로, 「고등교육법」에서 규율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③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군사교육 소집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조항은, 군사교육 소집기간이 아닌 복무기간 중의 처우 차이가 군사교육 소집훈련 기간 동안의 보수지급을 달리 결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④ 지방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 정지형을 병과 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조항은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보다 행위 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불법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 한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문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장가입자가 소득월액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일정한 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하는 등 가입자가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장가입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직무와 관련 없는 고의범의 경우 일률적으로 퇴직급여의 감액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되어 공무원들의 재산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 ③ 퇴직연금 수급자가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하도록 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공무원 퇴직연금의 급여 수준, 유족연금의 특성, 사회보장의 기본원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므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퇴직연금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④ 「기초연금법」 제3조제3항제1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은 한정된 재원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기초연금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문 6. 교육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안교육이 학교 형태로 시행될 때 필요한 시설기준과 교육과정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학교설립 인가를 받게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 범위 안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 교육법」 조항은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평생교육제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은 정규학교 과정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성인 등으로 하여금 고등학교학력을 취득케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중학교를 바로 졸업한 나이에 해당하는 만 16세 미만의 자에게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학력인정의 평생교육시설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다.
- ③ 교육방송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 때문에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학교교육의 단점을 보완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지역과 계층에 따른 교육적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해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을 제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조항이 학원 등 운영자를 교육방송 운영자와 다르게 취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 ④ 헌법 제31조제3항의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비용을 학령아동의 보호자 개개인의 직접적 부담에서 공동체 전체의 부담으로 이전하라는 명령일 뿐, 의무교육의 비용을 오로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해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문 7. 근로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특수경비원의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기본권제한을 완화하거나 보상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조차 없이 일반근로자인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를 획일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특수경비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
- ②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 및 복리후생비의 일부의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지급주기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두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교섭에 있어 그 창구를 단일화하도록 하고,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④ 노동조합을 설립할 때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은 근로자들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문 8. 혼인과 가족생활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자유로운 인격실현을 보장하는 자유권적 성격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을 함께 지닌다.
- ② 출생신고 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통상 사용되는 한자’로 제한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가 정한 ‘인명용 한자’라는 기준에 맞추도록 강제하고 있어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
- ③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847조제1항 중 “부(夫)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 부분은 부가 가정생활과 신분 관계에서 누려야 할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외국인의 결혼동거목적 사증발급 신청 시 한국인 배우자인 초청인이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특히 혼인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가족결합권을 제한한다.

문 9.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 및 그 취소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국가에 폭넓은 입법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자격취소로 인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 ②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해서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그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과 운전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③ 보존과학업자로 하여금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예정금액에 따른 일정 경력 이상의 보존과학기술자를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고, 1명의 보존과학기술자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보존처리 건수를 제한하는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조항은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 ④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자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조항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문 10.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통하여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도 그 재원의 형성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임금의 성격도 가미되어 있으므로,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손해배상 내지 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서 산재보험의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어 다른 사회 보험수급권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 ③ 건강보험수급권과 같이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급자의 상당한 자기기여를 전제로 하므로, 수급자의 자기기여가 없는 상태에서 건강보험수급권이 정지되더라도 이를 재산권 침해로 다룰 수는 없다.
- ④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의 경우에도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 제한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 11. 국회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장은 천재지변의 경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고,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②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국회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 ③ 의사공개의 원칙은 방청 및 보도의 자유와 회의록의 공표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의사공개의 원칙은 절대적인 것으로 단순한 행정적 회의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을 천명한 것이다.
- ④ 국회의원이 그가 발의한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철회할 때에는 본회의의 동의 없이 발의의원 2분의 1 이상이 철회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철회할 수 있다.

문 12.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국회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나, 국회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국회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국회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국회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하여야 한다.

문 13.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권자 총수의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3분의 1 이상의 득표가 있어야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
- ② 국무위원은 행정각부의 장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는 원칙적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기능으로서 우리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고, 법률로써 폐지·소멸시킬 수 없는 헌법상 기능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권 및 소추권은 입법부·사법부가 아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 할 것이다.
- ④ 국무총리제도가 채택된 이래 줄곧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서울이라는 하나의 도시에 소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므로, 국무총리의 소재지는 헌법적으로 중요한 기본적 사항이라 보이고 이러한 규범이 존재한다는 국민적 의식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이러한 관습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문 1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장이 일시적인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1개월 이상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판관 중 임명일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헌법재판소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으로 한다.
- ③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으나,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없다.
- ④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나,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문 15. 사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것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전제가 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다.
- ②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당원 경력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억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 ③ 법관은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으나, 법관으로서 퇴직하면 곧 바로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있다.
- ④ 대법원규칙으로 규율될 내용들은 소송에 관한 절차와 같이 법원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무에 관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므로, 법원의 축적된 지식과 실제적 경험의 활용, 규칙의 현실적 적응성과 적시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권법률에서의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정도는 다른 규율 영역에 비해 완화될 수 있다.